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이란

Islamic Republic of Iran

2019년7월30일 | 책임조사역(G3) 윤서희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 | | | |
|--|--|--|--|
| 면적 1,648 천 km ²  | 인구 82백만 명 (2018)  | 정치체제 신정공화국체제  | 대외정책 반미, 친중국  |
| GDP 4,523억 달러 (2018)  | 1인당GDP 5,491달러 (2018)  | 통화단위 Rial (IR)  | 환율(U\$기준) 42,000 (2018)  |

- 이란은 2017년 말 기준 베네수엘라, 사우디, 캐나다에 이은 세계 4위의 원유 확인매장량, 세계 1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이며, 세계 26위이자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중동 2위의 GDP 규모를 지닌 경제대국임.
-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 맹주국으로서, 수니파 이슬람 대표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 지역 패권을 두고 오랜 기간 경쟁관계에 있음. 아울러,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민족주의 성향의 이슬람 공화정이 들어서면서 기존 팔레비 왕조를 지지했던 미국과 적대관계로 돌아섬.
- 이후 미국은 이란의 급속한 경제발전, 핵무기 개발 및 그로 인한 중동 내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여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통해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왔으며, 2010년에는 '포괄적 대 이란 제재'를 발효하여 압박의 수위를 높임.
- 2015년 이란과 P5+1* 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타결됨에 따라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동결·축소하고 국제사회는 대 이란 경제제재를 완화하기에 이르렀으나, 2018년 5월 8일 미국이 JCPOA 탈퇴를 선언하고 대 이란 경제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은 극심한 경제위기 상황에 놓임.

* 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및 독일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10. 23 수교 (북한과는 1973. 4. 19)

주요협정 문화협정('75), 수산협력협정('78), 항공협정('98),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06), 무역협정('09), 이중과세방지협정('09), 세관상호지원협정('17), 해상운송협정('18)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 구분 | 2016 | 2017 | 2018 | 주요품목 |
|----|-----------|-----------|-----------|------------------|
| 수출 | 3,714,040 | 4,015,873 | 2,291,261 |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승용차 |
| 수입 | 4,647,659 | 7,989,300 | 4,089,620 | 원유, 동, 아연 |

해외직접투자현황(2019. 3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33건, 56,618천달러

국내경제

미국 정부의 경제제재 복원으로 2018년부터 경제상황 악화 일로

-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민족주의 및 반미 성향의 이슬람 공화정이 들어선 이후 미국과 오랜 기간 대립해 왔으나, 2013년 6월 이란 대선으로 온건 개혁파 Hassan Rouhani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과 이란은 정상 간 대화를 개시함.
- 이란과 P5+1*은 2013년 11월 잠정 핵합의안인 '공동행동계획(JPOA; Joint Plan of Action)'을 체결하였으며, 20개월 간 추가 협상을 거쳐 2015년 7월 최종 핵협정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을 체결하였음.
 - * 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및 독일
- JCPOA에 따라 이란은 저농축 우라늄 비축량 제한 및 원심분리기 감축, 중수 원자로 중심부 노심 제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에 의한 관련 시설 정기 점검 등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함에 따라, 이란은 2016년 및 2017년 원유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 등 경제성장을 누림.
- 그러나 2016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 Donald Trump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 정부는 2017년 10월 이란의 JCPOA 미준수 발표, 2018년 1월 JCPOA 재협상 요구 등 강경한 대 이란 정책 기조로 회귀한 끝에 2018년 5월 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하였으며, 동년 8월 및 11월 두 차례에 걸쳐 대 이란 경제 제재를 복원시킴.
- 2016년부터 제재 완화로 회복세를 보이던 이란 경제는 2018년 미국의 JCPOA 탈퇴 및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으로 경제 및 수출 성장률의 마이너스 전환은 물론, 환율 및 물가상승률이 폭등하는 등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됨.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 주요 내용

| 구 분 | 내 용 |
|----------------------------|--|
| 1차 제재 복원 (2018년 8월 6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 정부의 미 달러 구매 및 취득에 대한 제재 • 이란과의 귀금속류(금 포함) 거래에 대한 제재 • 이란과의 금속류(알루미늄, 철강 등) 및 광물(흑연, 석탄 등) 등 거래에 대한 제재 • 이란 리알화 거래 제재 • 이란 정부가 발행한 국채 매입 금지 • 이란과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거래에 대한 제재 • 이란산 카펫 및 식료품 수입 면허 인가 취소 |
| 2차 제재 복원 (2018년 11월 4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 항만 이용, 이란 해운 및 선박 부문 제재 • 이란과의 원유,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거래 제재 •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한 이란 금융기관들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재 •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한 이란 금융기관들 앞 금융 통신문 서비스(SWIFT) 제공에 대한 제재 • 이란과 관련된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 관련 제재 • 이란 에너지 부문 제재 |

국내경제

(단위: %)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경제성장률 | -1.6 | 12.5 | 3.7 | -3.9 | -6 |
| 소비자물가상승률 | 11.9 | 9.1 | 9.6 | 31.2 | 37.2 |
| 재정수지/GDP | -1.8 | -2.3 | -1.8 | -3.9 | -4 |

자료: IMF, EU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 및 대규모 홍수피해로 경제 위축

- JCPOA 체결 및 발효로 경제제재가 완화된 2016년 및 2017년에 각각 12.5% 및 3.7%의 성장을 기록했던 이란 경제는 2018년 미국의 JCPOA 탈퇴와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으로 석유 수출이 타격을 받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3.9%), 2019년에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6.0%).
- 아울러 2019년 3월 및 4월 발생한 집중 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로 이란 전역에 단전, 단수, 침수가 발생하였으며(전체 31개 주 중 25개 주 피해), 교통 인프라(도로 1만 4천여 km 및 교량 700여 개) 및 농업 부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경제성장을 더욱 저해함.

리알화 약세 및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 폭등

- 경제제재가 완화된 2016년 및 2017년 이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9.1% 및 9.6%이었으나,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이 리알화 가치 폭락 및 수입물가 상승을 초래하면서 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1.2%로 급등함.
- 2017년 달러당 38,582리알을 유지하던 환율은 2018년 1월 미국이 120일 내 JCPOA 재협상 또는 탈퇴를 선언하면서 급등하기 시작함. 이에 이란 정부는 4월 10일 공식환율(정부환율)*을 달러당 42,000리알로 고정하였으나, 비공식환율(시장환율)과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임.
 - * 공식환율은 이란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환율로서 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특정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대부분의 경우 리알화의 시장가치를 반영한 비공식환율이 적용됨.
- 2019년 3월 및 4월 이란 전역에 걸친 홍수로 인해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는 등 추가적인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하여, 201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7.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리알화 환율 추이

단위 : 리알화/달러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 공식환율 | 33,226 | 40,864 | 42,000 | 42,000 | 42,000 | 42,000 |
| 비공식환율 | 38,582 | 78,118 | 128,696 | 138,288 | 141,690 | 148,182 |

* 자료: IMF WEO, IHS

국내경제

경제제재 복원으로 재정수입 축소 및 재정적자 확대 전망

-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으로 이란 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수출이 사실상 중단되며 재정 수입이 급감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7년 -1.8%에서 2018년 -3.9% 및 2019년 -4.0%(전망치)로 확대되는 추세임.
- 이란은 시아파 세력의 확장을 꾀하고자 중동 지역 분쟁에 적극 개입하는 군사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대외지출이 발생되고 있음. 이란이 지원하는 국가 및 조직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비롯하여 레바논 '헤즈볼라' 무장정파, 예멘 '후티' 반군,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정파 등 다수이며, 이들은 이란의 '대리인'(proxy)으로도 불림.
- 두 자릿수의 높은 인플레이션 및 실업률 등 자국 경제난 심화에도 불구하고 외국 분쟁 개입을 위해 막대한 대외지출을 지속하는 이란 지도층을 향한 대중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란 정부는 반정부 시위를 우려하여 보조금 및 복지 지출 축소를 감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재정수지 적자의 심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경 상 수 지 | 1,237 | 16,388 | 15,816 | 18,491 | 5,875 |
| 경상수지/GDP | 0.3 | 4.1 | 3.7 | 4.1 | 1.2 |
| 상 품 수 지 | 5,354 | 20,843 | 22,596 | 22,691 | 6,819 |
| 상 품 수 출 | 62,995 | 83,978 | 98,142 | 95,215 | 65,056 |
| 상 품 수 입 | 57,641 | 63,135 | 75,546 | 72,524 | 58,237 |
| 외 환 보 유 액 | 113,615 | 130,689 | 122,101 | 107,162 | 96,885 |
| 총 외 채 | 7,475 | 8,482 | 8,689 | 9,099 | 9,620 |
| 총외채잔액/GDP | 2.0 | 2.1 | 2.0 | 2.0 | 2.0 |
| D.S.R. | 0.7 | 2.1 | 2.0 | 1.5 | 2.0 |

자료: IMF, EIU

주요 수출품목인 원유의 수출 급감으로 수출증가율은 마이너스 기록

- 이란의 주요 수출품목인 원유의 수출은 2018년 상반기 일평균 2.4백만 배럴에 달하였으나,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의 영향으로 2019년 상반기 일평균 1.1백만 배럴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2019년 5월에는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조치* 마저 종료되어 2019년 하반기 원유수출은 일평균 60만 배럴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와 관련하여 8개국에 대해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 2016년 및 2017년 총수출 증가(27.0%, 4.9%)를 보였던 이란 경제는 원유수출 부진으로 2018년 총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1.9%), 2019년에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28.7%).

수출 및 수입이 모두 감소하여 경상수지는 '불황형 흑자' 기록

-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으로 이란의 원유수출 부진*과 더불어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수입규모가 크게 줄어 2019년 경상수지는 불황형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2018년 18,491백만 달러 → 2019년 5,875백만 달러).

* 이란 원유수출 추이(백만 배럴/일) : 2.1('16) → 2.5('17) → 1.8('18) → 1.1('19. 상반기)

외채상환능력

외환보유액 규모를 고려한 외채상환능력은 양호

- 이란의 외환보유액은 2018년 1,072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2019년에도 969억 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됨. 2019년 말 외채 관련 지표 추정치는 D.S.R(2.0%), 총외채잔액/GDP(2.0%),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3.6%) 모두 낮은 수준으로 외채상환 능력은 양호한 편임.
- 다만,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풍부한 외환보유액(2019년 기준 월평균 수입액의 16.6개월분) 보유에도 불구하고 2017년 달러당 38,582리알을 유지하던 환율이 2019년 4월 148,182달러까지 치솟은 점은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증대가 매우 큼을 의미함.
- 아울러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은 이란의 해외자산 동결, 이란 정부가 발행한 국채 매입 및 이란 금융기관들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이란을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 격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란의 외화자금조달능력은 현저히 저하됨.

구조적취약성

보수 강경파 득세로 인해 경제적 고립 야기

- 1979년 혁명으로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국방·경찰·사법·종교·경제 등 국가 전반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슬람주의 및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혁명수비대 및 보수 성직자 등 보수 강경파가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음.
- 국력 회복과 경제 재건에 있어 이란 정계는 반미주의 및 이슬람 원리주의를 고수하는 보수파와 서구식 근대화의 일부 수용을 지향하는 개혁파로 나뉘고 있으며, Hassan Rouhani와 같은 개방·개혁파 성향의 대통령 집권시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보수 강경파의 저항 및 반대가 극심함.
- Rouhani 대통령은 최대 업적인 이란 핵협정(JCPOA)이 미국의 탈퇴로 존폐 위기에 놓이고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으로 이란 경제가 급격히 침체 되면서 입지가 약화되어 남은 재임기간 동안 정책 추진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 현 개혁파 정권의 외교 및 경제정책 실패로 2021년 대선에서 보수 강경파로의 정권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서방과의 대립 및 경제적 고립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18년 3월 최고지도자 Ayatollah Ali Khamenei가 이란력 신년을 맞아 '국산품 애용의 해'를 발표한 데 이어 두 차례에 걸쳐 경제제재가 복원되었으며, 경제적 고립에 대응한 '저항경제'*가 부활함.
 - *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여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외화 유출을 방지하는 자급자족형 경제체제
 - 또한 국내산업 육성, 외국 기업의 현지생산, 투자를 통한 기술이전을 위해 높은 수입 관세율*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글로벌경쟁력지수는 관세부문 140위/140개국으로 최하위임(종합 89위/140개국).
 - * 이란 관세율 : 자동차(25%~100%, 일부품목 수입금지), 목재 바닥재(55%), 산업용 냉각기(32%), 담배(26%) 등

수니파 맹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출혈 경쟁

-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 맹주국으로서, 수니파 이슬람을 대표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랜 기간 지역 패권을 두고 출혈 경쟁을 지속하고 있음. 절대 다수이며 막강한 재력을 가진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에 맞서기 위하여, 이란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 지역 분쟁에 가담하여 시아파 및 친이란 세력을 지원하고 있음.
- 이란의 대외 군사비 지출은 2018년 기준 약 126억 달러(GDP의 2.6%)로, 이는 한정된 자원 하에서 자국 경제 육성 또는 자국민 보조금·현금지원에 필요한 예산 축소를 초래함. 이에 대한 이란 국민들의 불만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권력조직인 혁명수비대*가 군사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대외 지원 축소는 어려운 상황임.
 - * 혁명수비대 : 신정정치 수호를 위해 창설되어 최고지도자의 직접지시를 받는 군사조직으로, 민간경제에도 관여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

성장잠재력

부존자원 및 생산가능인력이 풍부하여 성장잠재력은 높은 편

- 2018년 말 이란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1,556억 배럴로 베네수엘라, 사우디, 캐나다에 이은 세계 4위이며,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32조 m²로 세계 최대 규모임. 전체인구는 82백만 명으로 사우디 인구(33백만 명)의 2.5배에 달하며, 그중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71%를 차지하는 등 풍부한 자원부존량과 노동력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은 높은 편으로 보임.
- 그러나, 경제제재로 인해 원유, 천연가스의 판로가 사실상 막혔으며, 실업률이 12%에 달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풍부한 부존자원 및 생산가능인력이 경제성장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정책성과

핵협정(JCPOA) 파기 위기로 Rouhani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및 정책 추진력 약화

- Rouhani 대통령의 대표 외교적 성과인 JCPOA 체결로 이란은 2016년 및 2017년 GDP 및 총수출규모 성장, 소비자물가 안정 등 경제제재 완화에 따른 경제회복을 누렸으나, 2018년 미국의 JCPOA 탈퇴와 이어진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으로 다시금 국제사회로부터 격리 및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는 상황에 놓임.

경제지표 변동 추이

| 구분 | 단위 | 경제제재 | 경제제재 완화 | | 제재 복원 |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실질GDP 성장률 | % | -1.6 | 12.5 | 3.7 | -3.9% |
| 총수출증가율 | % | -26.2 | 27.0 | 14.9 | -1.9 |
| 소비자물가상승률 | % | 11.9 | 9.1 | 9.6 | 31.2 |

- Rouhani 대통령은 서방의 핵 프로그램 동결·축소에 대한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경제제재 완화를 통한 이란 경제 재건을 도모하였으나, 미국의 정권 교체 및 대 이란 정책 기조의 변화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 악화 및 경제제재 복원이 초래되었는 바, Rouhani 대통령의 외교·경제 정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임.

정치안정

Rouhani 대통령의 외교 및 경제정책 실패로 2021년 정권교체 전망

- 온건 개혁파 성향의 Hassan Rouhani 대통령은 2013년 6월 당선 이후 서방과의 핵협상을 시작하여 2015년 7월 JCPOA를 타결시키는 업적을 이루며 2017년 5월 대선에서 57.1%의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2018년 5월 미국의 JCPOA 탈퇴 및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으로 정치권 내 입지가 약화됨.
- Hassan Rouhani 대통령과 함께 JCPOA 타결을 주도한 Javad Zarif 외무장관의 사의 표명, 강경 보수 성향인 Ebrahim Raisi의 사법부 수장 및 국가지도자운영회의 부의장 임명 등의 사례를 통해 권력 구도의 변화가 드러나고 있음.
- 혁명수비대 및 보수 성직자를 중심으로 한 강경 보수파 세력은 개혁파 정권이 추진하였던 JCPOA의 실패 및 그에 따른 경제여건의 악화를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고자 함.
- Rouhani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및 강경 보수파의 득세로 2021년 이란 대선에서 보수 강경파 성향의 대통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사회동향

경제적 요인에 의한 시위 발생가능성 높음

- 식료품 및 연료가격 인상, 높은 실업률, 낮은 소득 등 경제적 부담의 가중으로 저소득층 및 노동계층에 의해 반정부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보수 강경파 세력은 현재 이란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Rouhani 정권 앞으로 돌림으로써, 자신들의 정치권 내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

국제관계

미국의 JCPOA 탈퇴와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

- 1979년까지는 팔레비 왕조의 친미 정책으로 미국과 동맹관계였으나, 이슬람 혁명으로 민족주의 및 이슬람 원리주의 성향의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서고 이란 주재 미 대사관 직원 억류 사태 발발로 인해 미국과는 적대관계로 돌아섬. 이후 미국은 이란의 급속한 경제발전, 핵무기 개발 및 그로 인한 중동 내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여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통해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옴.
- 2013년 6월 온건 개혁파 성향의 Rouhani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국과의 대화 개시 및 JCPOA 타결로 양국 관계가 회복되는 듯 보였으나, 2016년 11월 Trump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강경한 대 이란 정책 기조로 회귀하여 양국 관계는 다시 경색됨.
- 2018년 미국의 JCPOA 탈퇴와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으로 인해 미국과 이란은 예전의 대립관계로 돌아감은 물론 군사적 갈등을 양산하여, 현재 양국 간 갈등은 악화 일로임.

국제관계

수니파 이슬람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지역 패권 두고 오랜 경쟁관계

-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 맹주국으로서, 수니파 이슬람을 대표하는 사우디와 중동 지역 패권을 두고 오랜 기간 경쟁관계에 있으며, 양국은 지역 분쟁을 세력 확장의 장으로 활용하여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에서 대립하고 있음. 그 결과 중동 지역은 친미 성향의 수니파 이슬람 진영과 반미 성향의 시아파 진영으로 나뉘는 경향을 보임.

중동 지역 내 이란 및 사우디 대결구도

| 구 분 | 내 용 |
|-----|--|
| 이라크 | 이란 및 사우디와 접경하고 있으며, 양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등가 실리주의 외교를 추진하고자 함.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 IS(이슬람국가) 격퇴에 있어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의 역할이 컸으며, 사우디로부터는 '스포츠 도시' 건설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 투자가 예정됨. 한편, 미국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축출한 이후 이라크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음. |
| 레바논 | 레바논 정치권은 기독교계 마론파 대통령, 수니파 총리 및 시아파 국회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8. 5월 총선에서 이란의 지원 받는 시아파 조직인 '헤즈볼라' 세력이 의회 의석 과반을 확보하여, 레바논 내 이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 시리아 | 시리아 내전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군과 사우디가 지원하는 국제동맹군이 대립하고 있음. |
| 예멘 |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가 지원하는 예멘 정부군과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이 대립하고 있음. |

유럽과의 관계는 소원해지는 반면, 중국·인도·러시아와 관계 강화

- 제재 위반을 우려하여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에 소극적인 유럽과의 관계는 소원해질 것으로 보이며, 원유 밀수입 또는 물물교환 등 제재 우회에 부분 협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도·러시아와의 관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제재 우회에 협조적인 국가들조차도 미국 정부의 강경한 대 이란 정책기조 및 Secondary Sanction*을 의식하여 이란과의 교역규모는 제재 복원 이전보다 크게 감소할 예정임.

* 미국이 아닌 제3국 국적 개인, 법인, 기관의 대 이란 거래 금지

외채상환태도

이란 경제제재 복원으로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율 악화

-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율은 경제제재가 완화되었던 2016년 및 2017년에 연체액을 대거 상환하면서 연체율이 개선되는 듯 보였으나, 경제제재 복원으로 외채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연체율이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임.

대 이란 OECD 회원국 ECA 지원금액 및 연체율 변동 추이

| 구분 | 단위 | 2013. 9월 | 2014. 9월 | 2015. 9월 | 2016. 9월 | 2017. 9월 | 2018. 9월 | 2019. 3월 |
|-------------|--------------|--------------|--------------|----------|--------------|--------------|--------------|--------------|
| 중장기 | 백만 달러 | 5,172 | 4,474 | n/a | 1,521 | 1,456 | 1,377 | 1,009 |
| 연체금액 | 백만 달러 | 1,384 | 1,935 | | 627 | 106 | 102 | 230 |
| 연체율 | % | 26.8 | 43.2 | | 41.2 | 7.3 | 7.4 | 22.8 |
| 단기 | 백만 달러 | 184 | 120 | n/a | 652 | 1,244 | 549 | 155 |
| 연체금액 | 백만 달러 | 35.4 | 37.5 | | 1.0 | 0.5 | 6.5 | 64.6 |
| 연체율 | % | 19.2 | 31.3 | | 0.2 | 0.04 | 1.2 | 41 |
| 전체 | 백만 달러 | 5,356 | 4,594 | n/a | 2,173 | 2,700 | 1,926 | 1,164 |
| 연체금액 | 백만 달러 | 1,419 | 1,973 | | 628 | 107 | 109 | 295 |
| 연체율 | % | 26.5 | 42.9 | | 28.9 | 4.0 | 5.7 | 25.3 |

* 자료: OECD CRAM (2015. 9월 데이터 없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 평가기관 | 최근 평가 등급 | 종전 평가 등급 |
|-------------|--------------|--------------|
| OECD | 6등급(2019.01) | 6등급(2018.06) |

OECD는 2019년 1월 이란의 신용등급을 6등급으로 유지하였으나, 7등급으로 하향조정 의견도 존재

- 2019년 1월 열린 OECD CRE 회의에서 2018년 기준 GDP 대비 총외채 잔액 비중 및 D.S.R. 모두 2%대로 양호한 점을 감안하여 이란에 대해 6등급을 유지*하였으나,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 및 원유 수출 타격을 이유로 7등급으로 하향조정하자는 의견도 존재함.

* 2018년 6월 OECD CRE 회의에서 미국의 JCPOA 탈퇴 및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 선언으로 이란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5등급에서 6등급으로 1단계 하향조정하자는 바 있음.

이란 OECD 등급 변동 추이

| 구분 | 2013. 1월 | 2014. 1월 | 2015. 1월 | 2016. 1월 | 2017. 1월 | 2018. 1월 | 2019. 1월 |
|---------|----------|----------|----------|----------|----------|----------|----------|
| OECD 등급 | 7등급 | 7등급 | 7등급 | 7등급 | 6등급 | 5등급 | 6등급 |

* 자료: OECD

- 이란은 2015년 핵협정(JCPOA) 체결로 2016년 및 2017년에 걸쳐 경제제재 완화에 따른 경제회복을 누렸으나, 2018년 미국의 JCPOA 탈퇴와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으로 원유 수출이 급감하고 환율 및 물가상승률이 폭등하는 등 경제위기 상황에 놓임.
- 온건 개혁파인 Rouhani 대통령의 대표 업적인 JCPOA의 존폐 위기와 경제정책 실패가 지지율 하락 및 정책 추진력 저하로 이어져 2021년 예정된 대선에서 보수 강경파로의 정권교체가 예상되며, 이란경제는 자급자족하는 폐쇄경제로 회귀할 전망이다.
- 이란은 중동 지역 내 사우디로 대표되는 친미 성향의 수니파 진영에 맞서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 외국 분쟁에 적극 개입하여 친이란 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대외지출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이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